

대지진후 한일 우정, 변화 기대했건만…

日 中학 모든 지리·공민교과서 독도영유권 주장

“한국이 불법 점거” 표기도 늘려…한일 관계 급랭

일본의 새로운 중학교 사회교과서 가운데 모든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드러나 과문이 일고 있다. 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 숫자도 1종(種)에서 4종으로 늘어났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과 발표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독도 영유권 침탈 기도를 가시중 노골화한 것으로서, 일본 대지진 참사를 계기로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협력관계를 급격히 냉각시키며 양국관계의 중대한 악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전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지리 4종, 역사 7종, 공민 7종 등 모두 18종으로, 이중 모든 지리교과서와 공민교과서를 포함해 총 12종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존 중학 사회교과서 23종(지리 6종, 역사 9종, 공민 8종) 가운데

10종(지리 6종과 공민 4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왜곡교과서 숫자가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고 비중도 43%에서 66%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가 기존의 후소사(扶桑社) 공민교과서 1종에서 지리교과서 1종과 공민교과서 3종 등 모두 4종으로 늘어났다.

지리교과서 가운데 교육출판(教育出版)은 지도와 함께 “竹島(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1952년 이후 한국 정부가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표기했고, 공민교과서 가운데 도쿄(東京)서적은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어…”, 이코호사는 “한국에 의한竹島의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없이 행하여 불법점거인 바”, 지유사(自由社)는 “북방영토와竹島을 러시아와 한국이 각각 불법으로 각각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단호하게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양중 항의했다. 외교통상부는 30일 조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 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검정 절차를 요청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 30년간 사용해 노력화된 독도 헬리포트(헬리콥터 이착륙장)의 보수공사에 착수하고 환경체계관과 전시관 등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해 일본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검정 절차를 요청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 30년간 사용해 노력화된 독도 헬리포트(헬리콥터 이착륙장)의 보수공사에 착수하고 환경체계관과 전시관 등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해 일본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검정 절차를 요청했다.

이는 기존 중학 사회교과서 23종(지리 6종, 역사 9종, 공민 8종) 가운데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결정은 통과한 교과서들은 오는 7~8월 교육위원회에 의해 교과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결정과 발표를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보고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양중 항의했다. 외교통상부는 30일 조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 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검정 절차를 요청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 30년간 사용해 노력화된 독도 헬리포트(헬리콥터 이착륙장)의 보수공사에 착수하고 환경체계관과 전시관 등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해 일본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검정 절차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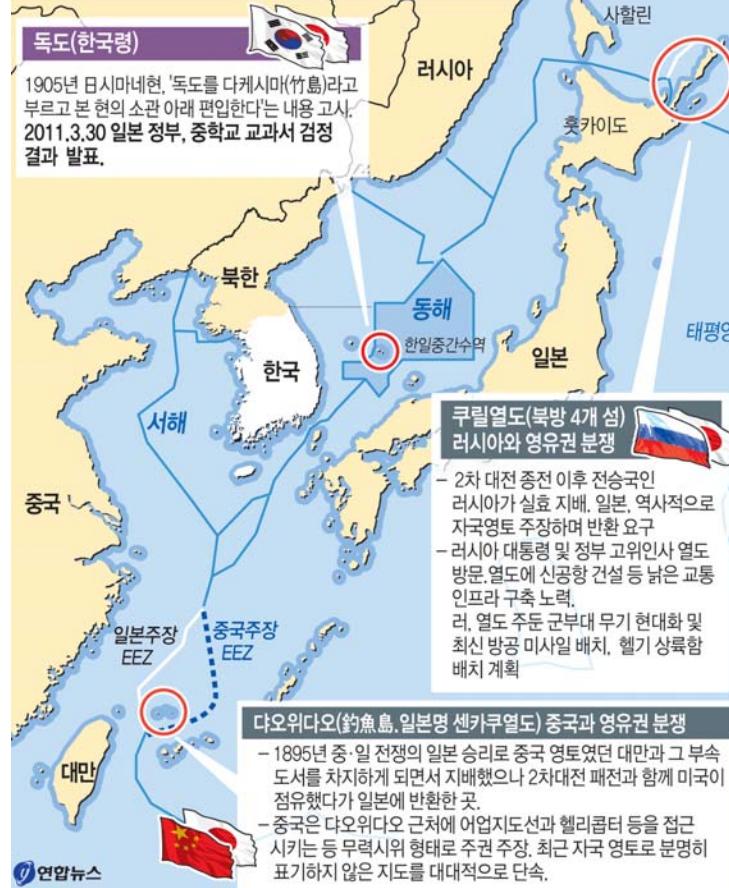
정부는 특히 지난 30년간 사용해 노력화된 독도 헬리포트(헬리콥터 이착륙장)의 보수공사에 착수하고 환경체계관과 전시관 등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해 일본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검정 절차를 요청했다.

이는 기존 중학 사회교과서 23종(지리 6종, 역사 9종, 공민 8종) 가운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중학교 교과서 결정 결과를 발표한 30일 서울 도립동 외교통상부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와 함께 굳은 표정으로 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영토 분쟁 지역



“독도 영유권 주장은 침탈 행위”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결의문…실효적 조치 강구 촉구

전국 시·도지사는 30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규탄하면서 독도 침탈 아목과 역사 왜곡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도 이날 공동 결의문을 통해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것은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아목을 차단하고 역사 왜곡 재발 방지 위한 실학적 조치를 강구하자”고 주문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독도를 관할하는 김관용 경북지사가 발표한 공동

고 안전하게 접안하도록 독도방파제를 조기건설하고 독도의 주민숙소를 내달 준공하며 동해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실학적 지배 강화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독도 해역 평화호 선상에서 23개 지역교육청 교육장협의회를 열고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왜곡 구단화를 개최했다.

대회에서 이영우 도교육감이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태 움직임을 차단하고 역사 왜곡 재발 방지를 위한 실학적 조치를 강구하자”고 주문했다.

경북도는 정부와 공조해 독도에 쉽게 접근해 목격문을 낭독했다. /연합뉴스

백제봉 등 17개 남극지명 사전 등재

국토해양부는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아리랑봉과 백제봉 등 우리나라 고유지명 17개가 처음으로 남극지명 사전에 등재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남극지명 사전은 영국 케임브리지 소재 남극과학연구원이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교육활동에 힘쓰겠다’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1~4호기 폐쇄키로

건물 지붕 특수포로 덮는 방안 검토

도쿄전력의 가쓰마타 쓰네히사 회장은 30일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를 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1~4호기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쓰마타 회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의 상황을 관찰적으로 볼 때 폐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 사고를 냉대해 대해서는 “건물의 폭발과 방사성 물질의 유출 등으로 여러분에게 불안과 심려, 걱정을 끼친데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가쓰마타 회장이 회견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폭발 등으로 원자로 건물의 지

붕이 날아간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일부 건물 지붕을 특수한 천으로 덮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과 관련 “파손된 건물에 특수천을 덮어 방사성 물질의 비산을 막고 오염된 물을 유조선 등으로 회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다노 장관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수습 시기와 관련 “원자로내 연료봉과 사용후 연료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내리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고의 수습 시기를 책임을 갖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작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복귀

경제성장을 6.2% 8년來 최고

작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1조달러대로 복귀하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2만달러대로 재진입했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6.2%를 기록하면서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GNI 증가율도 8년 만에 최고치였다. 총저축률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둑의 비중을 높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6년 만에 50%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0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759달러로 집계됐다. 1인당 GNI는 2007년 2만1695달러

를 기록하면서 처음 2만달러를 돌파했지만,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1만9296달러로 떨어지면서 1만7193달러로 추어ざ락했다.

작년 명목 GDP가 1조143억달러로 전년보다 21.6% 높아나면서 2007년 이후 3년 만에 1조달러대로 복귀해 대미 달러 환율이 연평균 9.4%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물가 등을 고려한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GNI는 전년보다 5.5% 증가했다. 이는 2002년 7.5%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작년 실질 GDP 성장률은 6.2%로 2002년의 7.2% 이후 가장 높았다. 1월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국민총처분기능소득은 9.4% 증가했다. /연합뉴스

“인감증명서 필요없다”

내년 중반 서명확인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서 빠르면 내년 중반부터는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대체·병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31일 입법예고하고 있다

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인감 도장을 만들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등록을 하는 본인이나 행정관이 행정적으로 인감 대장을 관리하는 수고가 크게 줄어든다. /연합뉴스

제5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1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I. 유동 자 산	335,157,412	I. 유동 부 채	5,820,051,666
(1) 당 자 산	335,157,412	1. 매 입 채 무	76,651,514
현금및현금성자산	184,517,822	2. 단 기 차 입 금	807,000,000
기 타	150,639,590	3. 미 지급 범 암 세	910,359,010
II. 비유동 자 산	5,440,177,373	4. 매 출 채 무	44,290,200,134
(1) 유형 자 산	5,440,177,373	5. 미 수 금	3,939,480
토지	3,073,240,004	6. 미 지급 비 용	10,045,029
건물	1,674,483,606	7. 선 금	2,017,593
감가상각누계액	6,977,015	8. 선 금 비 용	2,395,100
구축물	57,885,543	9. 유동 부 채	5,815,689,223
감가상각누계액	482,382	10. 차 본 금	10,000,000
기 계 장 치	561,068,720	11. 보증금	3,866,390,000
감가상각누계액	14,634,538	12. 예금 및 예금	4,232,607,645
차량운반구	7,376,784	13. 기타 차 본	4,060,250
감가상각누계액	27,243	14. 저축금	1,725,537
비품	102,992,399	15. 퇴직금	11,500,704
감가상각누계액	14,498,505	16. 저축 예금	10,000,000
부채와자본총계	5,775,334,785	17. 보증금	1,391,500
		18. 저축예금	1,000,000
부채와자본총계	5,775,334,785	19. 저축 예금	1,000,000

제1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1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tbl_r cells="4" ix="3" maxcspan